

UN인권위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ICC 회부는 어려울 듯

〈국제형사재판소〉

찬111 반19 기권55 통과...총회 통과돼도 구속력은 없어

北 외무성 반발 “더이상 대화 불필요...결의안 거부”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사상 최고 수준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될지 주목된다.

또 올해 채택된 결의안은 과거 9차례 결의안과 달리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돼 실제로 북한의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역대 최고 수준의 결의안 채택=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표결에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한 것을 고려하면 본회의에서의 결론도 다르지 않을 게 확실시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다.

첫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결의안은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실태에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였다.

이후에도 유엔 총회는 이 결의안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매년 채택했다. 2012년과 2013년에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표결이 이뤄져 압도적인 표 차이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않는 데 더 악화되고 인권 탄압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 이처럼 강도 높은 결의안을 유엔이 채택할 수밖에 없게 한 주요 배경이다.

지난 2월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침해가 빈번한 인권 침해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다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엔 총회가 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고, 안보리는 이 보고서의 권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했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이 구속력이 없는 데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유엔 총회 인권문제 담당 제3위원회의 표결에 앞서 북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위원회 국가 대표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는 모습이 모습의 회의장 전면 스크린에 비치고 있다.

비해 안보리에서의 의결은 전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이 같은 COI의 보고서는 결국 북한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하는 계기가 됐다.

북한으로서는 지난해까지 유엔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만 하고 북

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의 거듭된 방북 요청에는 귀를 닫아버린 것이 오히려 '자중수'로 작용한 셈이다.

◇실제 ICC 회부는 쉽지 않을 듯=위원회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셈

이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다. 결의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 유엔소식통은 “총회 결의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이 없으며 안보리를 구속하지도 않는다”면서 “총회 결의안대로

안보리에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다만, 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안보리 내부에서 북한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 안보리 차원에서 결의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통과시킬 수 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15개국 중 9개국이 동의하면 가능해 중국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발의 가능하다.

다만, 결의안이 발의되더라도 안보리를 통과시키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지금까지 보인 입장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통과된 결의안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남기고 최고 책임자 등을 가려내 제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다.

◇북한 측 반발=유엔 총회 결의안이 통과되자, 북한 대표들은 국제사회가 대결을 선택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부국장과 주 유엔 북한대무부의 김성 참사관 등 북한 대표들은 이날 결의안이 통과되자 채택을 주도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리고 미국 등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결의안 통과 이후 발언권을 얻은 최 부국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아베의 승부수...내일 중의원 해산·내달 총선거 실시

소비세율 인상 연기 방침

일본 국회가 오는 21일 해산되고 다음 달 총선거가 시행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1년6개월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해 오는 21일 국회를 해산해 총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를 확실히 성공시키기 위해 10%의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내년 10월에 하지 않고, 18개월 연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전날 발표된 7~9월 GDP(국내총생산) 잠정치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타남에 대해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평가한 뒤 “소비세를 올리지 말자 40명 이상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었고, 내 경제정책 브레인으로부터도 의견을 듣고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2017년 4월로 연기된 소비세율 인상은 경기상황에 따른 재연기없이 무조건 시행하겠다고 아베 총리는 공언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해 오는 21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국회 해산의 이유에 대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제

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뒤 “정권의 경제정책과 성장전략을 계속 진행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바라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연립여당이 과반(전체 475석 중 238석) 의석을 유지할 수 없다면 아베노믹스는 부정된 것이기에 (총리직에서) 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립여당은 전체 의석(현재 480석)의 68%인 325석(자민 294·공명 31석)을 차지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 세율을 낮추는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아베 총리는 덧붙였다.

중의원 해산 결정에 따라 4년 임기의 중의원 475명(2012년 총선 당시 정원에서 5명 감소)을 뽑는 차기 총선거는 ‘12월 2일 고시·12월 14일 투표표’의 일정으로 치러진다.

아베 총리는 이 같은 선거 일정을 이날 자민당 간부에게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중의원 총선거는 자민, 공명 양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했던 2012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에너지, 원전, 안보정책 관련 내용도 자민당 총선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홍콩시위대 국회 진입 시도...경찰과 충돌

벽돌로 출입구·창문 훼손

강제해산 작전에 반발

홍콩당국이 도심에 점거한 시위대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해산 작전’에 돌입한 가운데 시위대 일부가 입법회(우리 국회격)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다.

홍콩 봉황(鳳凰) TV에 따르면 애드미럴티(金鐘) 지역에 집결해있던 시위대는 19일 오전 1시(현지시간)를 넘어 입법회로 이동했으며, 시위대 일부는 바이케이드와 벽돌 등을 이용해 입법회 출입구 유리창 등을 충격해 출입구 두 개를 훼손했다. 이들은 입법회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봉황TV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 시위대 일부가 바리케이드로 출입구 창문을 훼손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몇 분 뒤 출동한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며 강제해산을 시도했고 이에 대해 시위대는 우산을 펴고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입법회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주변을 병력으로 완전히 봉쇄했다.

시위대가 이날 입법회를 ‘습격’한 것은 홍콩당국이 전날부터 본격적인 시위대 ‘강제해산 작전’에 돌입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드미럴티 지역의 시빅타워(中信大廈) 주변에서는 전날 약 30명의 법원 집행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부들이 바리케이드 등 시위시설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런 조치는 지난주 홍콩 고등법원이 내린 점거금지 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날 현장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티어,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씨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의 2종
비탈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의 2종

원적외선 히터의 11종

대형 제습기의 2종

이동식 에어컨의 11종

범씨 온탕 소독기의 5종

무등산업 (062) 372-7585 사·군 취급점
010-3601-7701 선착순 모집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회원	재혼
♂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자,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벅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산 여성' 희망 31-58세
		♀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14번방 210 5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